다산포럼

김정남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

기미 생(己未生). 1919년 3·1만세운동 때 태어나신 내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내게 전화를 거신다. 얼마 전 어머니는 내게 "너도 이제 그만큼 늙었으니, 민주니 독재니 하는 이번 싸움 판에는 끼어들지 않을 수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다. 90이 훨씬 넘은 노인이 70을 넘긴 아들을 보고 애가 타서 하는 소리다. 30여 년에 걸친 군사독재의 악몽이 얼마나 진하게 여태까지 남아 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코끝이 찡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판이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요, 그 이후가 또한 민주 대 반민주의 싸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비록 연세 높고 또 시골에 계셔도, 살아오신 경륜과 육감으로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낌새를 다 헤아리고 계신 것 같다.

얼마 전 나는 1975년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975년에 사형을 당한 바우 김용원 선생의 아들로부터 과분한 저녁 대접을 받았다. 지난 봄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에서 있었던 그의 아버지 묘소이장 때 새로 세운 묘비의 글을 내가 썼다고 각별히 초대해 준 것이다. 내가 짓고 청민(淸民) 오병철 선생이 쓴 그 비문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암장(暗漿)으로 살다가/ 활화산의 뜨거운 분출을 미룬 채 갔으니 분하다/ 그러나 그는 조국의 산하에 의로움으로 남아/ 그의 사랑은 사람마다의 가슴 속에 꽃으로 피어날 것이요/ 그의 생각과 열정은 겨레의 숨결로 살아날 것이다."

40의 나이에 사법살인으로 세상을 떠난 김용원 선생과 그 가족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아리고 시리다. 그는 군대에 갔다 온 나이가 많은 선배로, 나는 그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회의와 궁극적인 질문들을 부여안고 고뇌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다. 또한 5·16쿠데타로 감옥에 들어간 친구, 이수병의 옥바라지를 아무런 불평 없이 했다. 오히려 그가 자신의 친구인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 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와 한날 한시에 죽었다.

교사특별전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우수교사로 5년째 경기여고에 재직 중이던 1974년 4월 1일, 영장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지 1년 하고 8일 만에 주검으로 돌아왔다. 그 1년 동안 그는 단 한번도 가족면회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민청학련 사건의 핵심인물로 구속되었던 유인태에 의하면 죽기 하루 전 그는 다음날 자신이 처형될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한다. 운동 시간에 그가 유인태에게 수갑이 미제로 바뀌었다면서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도 전인 4월 8일 새벽 3시에 이미 군법회의 검찰부에 사형선고 통지가 접수되었고, 정작 4월 9일 새벽 4시부터 사형을 집행한 구치소에는 그날 오후 3시에야 사형선고 통지가 왔다는 것이다.(김형태 변호사의 비망록)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도 전에 사형선고가 통지되고, 사형선고 통지가 오기도 전에 사형이 집행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면 바로 사형을 집행하라는 대통령 박정희의 명령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다.(국정원 진실위 보고서)

그로부터 32년이 지나, 이들은 20여 회에 걸친 재심공판을 거쳐, 2007년 1월 마침내 전원이 무죄의 선고를 받았다. 그렇지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인혁당 사건에는 1975년의 판결과 2007년의 판결, 두 개가 있다고 마지막까지 우기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9월 24일 마지못해 "5·16과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1974년 지학순 주교는 그의 옥중 메시지에서 "화해는 진실과의 화해이어야 하고 전제를 일삼아온 강자가 억압에 찌들은 약자에게 먼저 청해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화해와 용서를 말하려면 먼저 진실 고백과 사죄가 있어야 한다.

이 나라 지도자가 일차적으로 지녀야 할 최고의 가치는 뭐니뭐니해도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신념과 실천의지다. 어떻게 하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하고, 그것이 후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용서할 수는 있으나 잊을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잊으면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찍이 함석헌 선생은 '사상계' 1958년 8월호에서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외쳤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는 깨우침이라고 생각한다. 그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론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고품질 인증 전남쌀 이제 제값받기 나서야

올 가을 세차례의 태풍 피해에도 불구, 전남산 쌀의 품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2012년 전국 고품질 쌀 평가'에서 전국 12개 브랜드 중 이 지역 쌀 4개가 선정돼, 10년 연속 전국 최다 선정의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브랜드별로는 함평 '나비쌀', 보성 '녹차미인 보성쌀', 영광 '사계절이 사는 집', 장흥 '아르미쌀'이 뽑혔으며, 해남 '한눈에 반한쌀'은 12대 브랜드와는 별도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전남쌀은 쌀 주산지와 친환경 농업 메카라는 명성에 걸맞게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쌀로 입지를 확고하게 굳혔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0개 회원 단체) 주관 하에 실시된 이번 평가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 1870여 쌀 브랜드 중 12개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전남 쌀이 4개나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03년부터 평가가 실시된 이래 매년 4~5개의 브랜드가 선정되는 기록도 갖게 됐다.

그러나 주목할 건 전남 쌀이 낮은 가격에, 인지도마저 크게 떨어져 여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지 쌀값을 비롯해 유통업체의 벼 매입가격과 햅쌀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하락률 또한 폭이 크다고 한다. 이는 전남 쌀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안 된데다 막연히 '경기미가 좋다'는 소비자들의 왜곡된 인식 때문이다.

농민들의 입장에선 같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도 제값을 못 받는 게 억울한 일이요, 전남지역 전체로 보면 막대한 손해다. 더 이상 좌시해선 안 되는 이유다.

전남도와 농협, 농민단체 등은 전남의 대표 브랜드와 연계하는 쌀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소비자단체가 인정한 전남 쌀의 식감과 미질 등을 널리 알려 이미지 제고에 전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죽음 부른 고교생 현장실습 이대론 안 된다

울산 신항만공사 현장에 투입된 순천효산고 3년 홍성대 군 등 12명이 사망·실종된 사고를 계기로 고교생 현장실습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도 높은 노동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실습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홍 군은 지난 14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선의 전복사고로 실종됐다. 지난 10월 22일 다른 동급생 8명과 함께 울산항만공사 건설현장에 투입됐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다.

고교 선배가 대리로 근무하는 인연과 전공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기대에 이곳을 찾은 홍군은 회사 숙소에서 현장까지 이동해 매일 7시간 이상 타설작업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는 타직장의 퇴근시간과는 달리 오후 7시10분 숙소로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실습생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부족 인력을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려는 기업들의 속셈 탓이다.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광주·전남대책위'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실습생의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1년 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실습 중이던 영광실고의 한 학생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특성화고는 기업체 현장실습이 실무능력을 익힐 수 있고, 취업에 용이하다는 점을 들어 고3년생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있다. 기업들도 싼 임금으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선호하고 있다.

학교와 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셈이다. 따라서 홍군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날 개연성은 상존해 있다. 무엇보다 기업이 부족 인력을 대체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현장실습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계당국도 실습생 근무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네팔에서 온 편지 〈31〉

'차우뻐디'로 고통받는 네팔 여성들

박행순

얼마 전 '카트만두 포스트'는 이웃 나라 여성들이 당하는 잔인한 인권침해 사례를 기사로 다뤘다. 한 남성은 자신의 허락없이 외출한 아내를 '창녀'라고 비난하면서 아내의 코를 베어버렸다. 남편은 몇 개월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해서는 아내와 이혼했다. 그 나라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코를 자르는 악행이 매년 200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기자는 여성의 코가 수난을 당하는 이유는 코가 체면과 위신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체면을 손상시키는 자녀에게 부모는 "너 때문에 밖에서 코를 들고다닐 수가 없다"라면서 자녀를 나무란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경우에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하다.

지난 11월 29일은 '여성인권수호자의 날'이었다. 신문은 이날 '라다 말라(Radha Malla)'라는 여성을 네팔의 여성인권수호자로 소개하면서 여성 인권 침해 사례로 '차우뻐디'를 기사로 다뤘다. 말라는 한 여성지원단체의 대표로서 네팔의 미신적 악습인 차우뻐디를 근절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차우뻐디는 생리기간이나 출산 후의 여성을 부정하다는 이유로 집밖으로 내몰아서 헛간이나 마구간에서 지내게 하는 네팔의 오래된 관습이다. 사람들은 생리 중인 여성들은 부정하고 불결하기 때문이 이들이 집안의 같은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거의 종교적 신앙 수준이어서 바뀌지가 않는다. 말라는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차우뻐디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여성들의 호응과 지지를 받지만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을 바꾸지는 못한다.

교육받은 지식인들은 차우뻐디가 분명 잘못된 미신적 관습이며 위험하다는 것을 안다. '마지'는 간호조무사로서 차우뻐디가 얼마나 잔인하고 위험하며 여성차별이라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말라와 마지도 생리 중에는 집안 어른들에 의해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헛간으로 내몰린다. 이를 어기면 이웃의 미움과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신은 때로 과학적 지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과 힘을 발휘한다.

네팔 중부지역과 극서부에서 차우뻐디는 더욱 철저히 지켜진다. 많은 여성들이 차우뻐디를 지키느라고 헛간과 마구간에서 지내다가 피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뱀에게 물리고 또 저체온증으로 사망한다. 산모들이 출산 후 따뜻하고 청결한 방에서 제대로 된 음식 섭취를 못하고 겨울에 춥고 불결한 마구간에서 지내다가 산후 합병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정부는 2006년 5월에 차우뻐디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지역 행정관으로 하여금 관리 감독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런 국가기관의 지시도 이 오래된 관행 앞에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네팔 정부가 차우뻐디를 근절시킬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차우뻐디를 강행할 경우, 가장에게 벌금이나 구속 같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면 될 것 같다. 하지만 네팔 정부는 왕정붕괴 후 헌법 개정도 아직 못하고 있다. 카스트나 차우뻐디 같은 오래된 관행을 법으로는 금하지만 실생활에서 근절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것 같다.

여성들은 여전히 생리 때마다 생리통과 함께 이 오래된 관습 때문에 이중으로 고통당한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헛간에서건 마구간에서건 며칠 고생하다가 살아남는다. 그러나 뱀에게 물려죽거나 산후 합병증으로 희생되는 여성들이 너무도 불쌍하다. 어른들이 이것을 죽은 이들의 운명이라면서 이 악습을 계속한다면 신생아와 남은 자녀들이 참으로 측은하고 안쓰럽다.

〈파탄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기고

비정규직 해법, 일자리창출과 사회책임 실천

설인철

유럽 연합국가의 재정위기, 미국과 중국의 실물경기 침체의 여파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환율하락까지 겹쳐 국내경기가 안정적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희망을 일구는 근로자와 기업인이 있고,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해서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가자는 국민적 여망이 모아지고 있어 향후가 많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노사민정(勞使民政)이 서로 협력하고 양보와 나눔의 문화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더구나 선거철을 맞아 내 놓은 정책들이 피아의 정책을 떠나 융합하여 잘 다듬어지고, 실천되어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은 성장의 여지가 많아서 매년 높은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이나,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같은 유형의 경제 저성장, 복지의 확장욕구로 국민은 만족감을 쉽게 느낄 수가 없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 될수록 더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은 더 그러할 것이다.

비정규직은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20대 후반 등 젊은 층으로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속에서는 가정생활이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향후 사회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노사가 그리고 노노가 한 발씩 양보하고 일자리 나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며, 더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통하여 비정규직 90%가 근로하는 1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을 길러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국민은 혹독한 IMF도 극복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민이다. 지금껏 그랬듯이 우리는 국제적인 재정위기와 저성장시대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상생 협력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적 책임실천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비정규직 문제 해소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여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노사관계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권익신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노사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젠 노사가 사회적 책임까지도 맡아서 국가경쟁력 제고에 앞장서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이를 실천해야한다.

비정규직 문제와 노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협력업체 지원, 노사의 재정 및 활동의 투명성, 신규고용창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마을기업육성, 사회적기업육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지자체의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로도맵 제시 등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전반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만들기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이 시대의 구호가 되고 있다.

전라남도는 2006년부터 산업평화 선언대회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4월 13일 화순군 모후사 주차광장에서 노사민정 1000여명이 모여 '동반성장을 위한 사회적 책임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소외계층 배려와 나눔의 문화가 되어 사회적 책임 실천운동이 노동단체 및 기업 중심으로 확산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전라남도는 고용노동부 '노사민정 협력부문 평가'에서 2008~2012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갖게 되어, 전라남도는 산업평화 안전지대로서 투자하고 싶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신바람나는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전남도 일자리창출과장〉

고용 많이하는 기업에 일정부분 인센티브 주자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앞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돕고 대기업 관련 정책을 펼 때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건의한다.

지금 국가적으로 고용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명절 때 가족 친지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은 취직이었다. 입만 열면 젊은층이나 노년층이나 취직이 최고의 화두요 관심사항이었다. 거기다가 요즘은 노년층 취업은 물론 젊은 세대 여성의 취업보다 아줌마 취업 즉 결혼한 주부들의 취업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취업만큼 더 큰 이슈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있던 자금을 풀어 재정 지원을 해주고 각종 세제 혜택을 주거나 창업지원, 수출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을 해주는 걸로 안다. 이런 지원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지원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게 바로 '전체 직원 중 고용 창출 인원을 비례로 계산해서 일정 숫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세제혜택이나 자금지원에 플러스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한 만큼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투자가 설비 투자에 집중된데다, 투자 계획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외투자여서 국내 채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 매출과 수출액이 아무리 늘고 이득이 많이 난다 하더라도 고용 규모가 크지 않고 주변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가 작으면 혜택은 투자자들에게만 집중된다. 즉 돈 가진 재벌들과 사업주만 더 돈을 벌 뿐이지, 고용창출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젠 국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더 대접해줘야 한다. 해마다 수출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상을 주고 훈장을 수여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훨씬 더 많은 훈장을 주고 세금 감면 혜택도 줘야 하는 것이다. 기업도 앞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자랑으로 여기는 풍토가 더 마련돼야 할 것이다. ▲나재필·광주시 서구 벽진동

無等鼓

외톨이

미국은 지구촌에서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나라 가운데 하나다.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만큼 '비극'도 많다. 특히 학교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난사로 큰 충격을 주곤 한다.

지난 2007년에 버지니아공대에서 현지인과 어울리지 못했던 한국계 대학생이 권총을 마구 쏘아대 학생 32명이 사망했다. 앞서 2006년에는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니켈 마인스학교에서 우유 트럭 배달부가 총기를 난사해 어린 여학생 1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지난주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20대 청년이 총기를 난사해 어린이와 교직원 등 2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범인인 애덤 랜자(20)는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못한 '외톨이'로 알려졌다. 그는 또 범행 전날 학교 교사들과 언쟁을 벌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심각한 총기사고와 크게 대조되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남녀 모두 병역의무가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총기를 휴대한 채 휴가와 외출 외박을 나와 도심을 거니는 군인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휴가병의 소총에는 항상 실탄도 장전돼 있다.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를 인솔하는 여선생님이 어깨에 소총을 메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총기사고는 극히 드물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주변 아랍국가와 언제 터질지 모를 총격전에 대비해 항상 총기를 휴대하는 군인과 소지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이 따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스라엘의 청소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집단농장인 '키부츠' 등에서 공동체의식을 배운다. 이 청소년들은 군대생활을 거치면서 단단한 연대감을 갖게 돼 큰 사고가 드물다는 해석도 있다.

코네티컷 총기 참사로 오바마 대통령이 눈물까지 보이며 개선책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총기참사를 막기 위해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숙제는 '외톨이'를 줄이는 일이다.

/박치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AX 227-9500〉	〈FA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